

《민주화로의 이행방식》에 관한 부르쵸아적론의의 반동성

한 철 주

오늘 제국주의정치변호론자들은 《민주화로의 이행방식》에 관한 론의를 통하여 모든 나라들이 정치체제를 서방화할것을 설교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책동을 미화분식하고있다.

랭전의 종식을 계기로 등장한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에서는 여러 나라들에서 기존의 정치체제가 《비민주주의》적인 체제로부터 《민주주의》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여러 가지 유형들로 분석하면서 《민주화로의 이행》의 《다양성》을 떠들고있다.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서방식다당제와 《자유선거의 도입》이 《민주화과정의 개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변화가 《민주화로의 이행》으로 된다고 제창한다.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이 규정한 《민주화로의 이행방식》들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내정간섭, 계급적원쑤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인한 여러 나라들에서의 서방식정치체제의 도입과정을 류형화한것에 불과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한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사상이 외곡변질됨으로써 사회주의가 방향을 잃고 자기 궤도에서 탈선하여 자본주의복귀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250페이지)

지난 기간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것은 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과 그에 놀아난 혁명의 배신자들의 추악한 변절행위에 기인된다.

이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복귀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사상이 외곡변질됨으로써 빚어진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의 부활로서 력사발전의 일시적이며 비정상적인 사태이다. 이것을 놓고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벌이면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력설하는것은 인류력사발전과정에 대한 무지에 기초한 자본주의변호론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발전의 정상적과정을 벗어난 비극적사태를 그 무슨 《민주화로의 이행》으로 미화분식하는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의 론의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죄악을 합리화하려는 파렴치한 꾀변에 불과하다.

《민주화로의 이행방식》에 관한 부르쵸아적론의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악랄한 내정간섭책동을 은폐하고 마치도 이 나라들의 내부에서 그 어떤 《합의》에 의하여 서방식자본주의정치체제가 부식된듯이 설교하는 꾀변이라는 데 있다.

《민주화론》에서는 《협정》에 의한 《이행》에서 주요한 《참가자》가 《엘리트》이고 《이행》의 성격이 타협적이라고 한다.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은 《협정》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참가자》를 포괄하고 그들의 극히 중요한 이익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협조주의》적인 형태를 낳는다고 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협정》은 서로 연계하고 의존하는데 대한 《일련의 동의》로서 각 《참가자》가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민주화》의 과정에서 주요한 《참가자》들간의 협조적인 관계가 조절되므로 《참가자》사이 혹은 정당들간의 경쟁성이 한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에 관한 협정》이란 상징적의미를 나타내며 내용적으로 놓고볼 때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책동에 힘을 얻은 국내의 반정부세력이 득세하여 투항주의적인 기존의 집권세력과의 타협으로 서방식정치체제를 확립한것을 의미한다.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은 《협정》에 의한 《민주주의에로의 이행》에 대한 논의에서 지난 세기 80년대말 뿔스까와 마자르에서의 국내의 반사회주의세력과 사회주의배신자들사이의 공모결탁을 전형적인 실례로 들면서 이것을 《종래의 지배정당과 반대세력사이의 협정》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당과 국가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압력에 굴복하여 반사회주의분자들을 사면복권시켜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여하였으며 결과 집권당과 사회주의정권의 권위가 심히 저락되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나라들에 축수를 뺏쳐 반사회주의세력을 사촉하고 비호하여왔으며 지어는 저들의 앞잡이로 전략된 반동분자들을 국제무대에서 《인권의 옹호자》, 《자유의 투사》로 내세우기 위한 외교공세까지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세력은 이 나라들에서 동유럽의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서막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특혜와 《원조》에 대한 약속을 늘어놓았다.

뿔스까의 경우 집권당의 사회주의배신자들은 반사회주의세력인 《현대성로조》와 1989년 4월 5일에 원탁회의를 벌려놓고 온갖 정치조직들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적인것으로 허용하고 《경쟁적인 선거》의 실시를 합의하는것으로 자본주의정치방식인 정치적다원주의를 끌어들이는 추악한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협정》에 의한 선거가 같은 해 6월에 실시되고 결과 이전 사회주의집권당인 통일로동당은 정권의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그후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나타나 1992년 봄에는 무려 135개의 공식적인 정당이 존재하는 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었다.

한편 이 시기 쏘련의 지도부를 차지하고있던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인도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니, 《사회주의적발전의 다양성》이니 하는 미사려구밀에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파괴하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책동을 묵인조장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저버린 사회주의집권당안의 배신자들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굴복하여 자유선거와 복수정당제를 도입할것을 약속해나섬으로써 결국 자본주의제도가 복귀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다.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은 여러가지 이행방식들가운데서도 이러한 《협정》이 정치적다원주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되며 《정치적불안정을 가져올수 있는 대립의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엘리트》들사이의 《교섭의 결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강화하는데서 가장 좋은 수단으로 된다고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민주화지원》의 명목으로 국내의 반사회주의세력을 비호하고 한편으로 정치경제적인 압력과 회유기만으로 이 나라들에서의 자본

주의복귀를 사촉한 결과에 발생한 역사발전의 비정상적인 사태로서 결코 민주주의와 결부될 수 없는 것이다.

《민주화에로의 이행방식》에 관한 부르조아적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과 그 앞잡이들인 해당 나라의 군부파쇼분자들의 군사쿠데타에 의한 서방식 자본주의정치체제의 수립을 합리화하는 궤변이라는데 있다.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은 《민주화》의 주요《참가자》가 《엘리트》이고 이행의 성격이 폭력적인 경우는 《위압》으로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위압》에 의한 《민주화》를 외부세력에 의한 것과 국내의 군부출신의 《엘리트》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부가 그의 지배적인 입장을 완전히 내주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형식상의 정권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위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위압》에 의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어느 것이나 다 군사적힘에 의한 서방식정치체제의 확립과 운영과정을 역지로 《민주화》와 결부시키는 궤변으로서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적발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군사적강점과 그 앞잡이들인 군부파쇼분자들에 의한 군사쿠데타 등은 사실상 민주화를 짓밟는 강압적무력행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은 마치도 이것이 일부 나라들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인듯이 설교하고 있다.

《외부의 위압》에 의한 《민주화》의 실례로서 제시되는 제2차 세계대전후의 일본의 경우를 놓고본다면 미제가 이 나라를 민주화할데 대한 국제협정들을 란폭하게 무시하면서 자라나는 민주화의 기운을 탄압말살하고 군국주의세력을 되살려 저들의 령전정책과 전세계에 대한 지배주의정책실현의 앞잡이로 내세웠다는것은 역사적사실이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령전의 개시와 함께 《마살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면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력량에 대한 탄압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의 정신적기둥인 《천황제》를 그대로 유지보존하도록 하고 우익반동들을 내세워 나라의 군국화를 추진하였다.

1949년에 들어서면서 조선침략전쟁도발준비를 다그치고있던 미제는 일본의 재군국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반동들로 하여금 민주력량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진행된 군국주의재생, 부활은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세계를 저들이 지배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한것으로서 결코 민주화와 결부되어 론의할 수 없다.

《내부의 위압》에 의한 《민주화》에 관하여 론하면서 남조선의 박정희군사파쇼도당의 군사쿠데타와 독재정치를 내세운것만 놓고보아도 《민주화론》이 표방하는 《위압》의 방식이라는것이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앞잡이들을 내세워 실시하는 식민지파쇼통치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기만적개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들에서 군사파쇼분자들에 의한 쿠데타를 그 무슨 《군부엘리트》에 의한 우로부터의 《민주화》로 규정하고 《권위주의》니 《제한된 민주주의》니 하고 변호하면서 그 파쇼적성격을 은폐하는것은 허용될수 없는 리론협잡이다.

미제의 군사적강점밑에서 박정희군사파쇼도당이 일으킨 5.16군사쿠데타로 말하면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모략의 산물이다. 남조선에서

4.19인민봉기이후 민주력량의 장성강화에 직접한 미제는 저들의 앞잡이인 박정희군사파쇼도당을 음으로 양으로 부추겨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게 하고 신식민주의적지배에 장애로 될수 있는 온갖 진보적력량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게 하였으며 매국역적 박정희가 집권위기에 처한 1970년대에는 유신파쇼독재체제의 수립을 적극 옹호하고 뒷받침하였다.

미제는 후에도 전두환, 로태우군부파쇼강패들의 《12.12 숙군쿠데타》와 《5.17파쇼폭거》를 묵인, 지지하여 남조선에서 반인민적인 식민지피뢰정권을 더욱 파쇼화하고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여왔으며 리명박역도에 이어 오늘은 군부와 정보기관을 동원한 《선거쿠데타》로 집권한 박근혜패당의 유신독재부활책동을 정치, 군사, 외교의 각 방면에 걸쳐 로골적으로 비호두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뿐아니라 전세계적범위에서 저들의 신식민주의적지배에 장애로 된다고 생각되는 진보적정권들에 대하여서는 그 나라의 반동적군부파쇼분자들을 사촉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친미피뢰정권을 수립하여왔다. 이러한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등장한 피뢰정권들에 대하여 《민주화》와 결부시켜 론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지배를 위한 피뢰정권조작책동을 합리화하는 꾀변이다.

오늘도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미제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행위와 《아랍의 봄》사태를 비롯한 전세계적범위에서의 무력간섭책동을 《위압》에 의한 《민주화》의 논리로 합리화하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진보적나라들에 대한 제재와 봉쇄, 내정간섭행위를 변호하고있다.

《민주화예로의 이행방식》에 관한 부르쵸아적론의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하여 사회주의를 붕괴시킨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을 합리화하는 꾀변이라는 데 있다.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은 《개혁》이라는것에 대하여 《민주화》의 주요《참가자》로 대중이 동원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서 《타협적인 형태로 체제이행이 진행》되는 방식이며 《정당이나 민주주의활동가, 결사가 민주화촉진의 기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협정》처럼 공모적이 아니기때문에 《경쟁적민주주의》를 가져올수 있다고 하면서 극구 찬양하고있다.

이 방식의 전형적인 실례로 체스꼬슬로벤스꼬(당시)와 동부도이칠란드(당시)의 경우에는 처음에 대중이 《참가자》로 되어 《비폭력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다가 개혁을 반대하는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강렬한 반대에 직면하여 도중에서 좌절》되었으나 궁극에는 《엘리트와 대중사이의 정치적양보》가 단기간에 진행되고 《민주화예로의 급속한 정치적동원》이 성공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이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복귀를 대중과 결부시켜 해석한 부당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동부도이칠란드에서의 사회주의붕괴는 철두철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모략책동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투항주의정책에 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동부도이칠란드에서 반사회주의세력의 득세를 위해 물질적, 재정적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소련의 집권당에 틀고앉아있던 사회주의배신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이 나라들에 대해 정치적으로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 방관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민주화론》의 제창자들까지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이후의 첫 선거과정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지지하고 요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기보다도 단순히 종래의 변질된 《공산당의 지배에 반대》하여 투표한데 지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즉 이 선거들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은 자본주의복귀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변질된 이전의 집권당에 대한 《항의행동으로서의 투표》로 되었다는것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집권당들이 사대주의에 빠져 쏘련의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제창하는 《개혁》, 《개편》로선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자주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을 견지하지 못한 결과 정치경제적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흐려지게 되었다.

력사는 사회주의집권당이 사회주의건설과정에 올바른 지도사상과 로선을 가지고 주체적립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심화시켜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의 진리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신념으로 무장시키지 못하면 당과 정권이 인민대중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주의를 말아먹는다는 교훈을 남기었다.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에게 투항변절하여 사회주의를 말아먹은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한 사회주의붕괴과정을 그 무슨 《민주화예로의 이행》으로 묘사하는것은 천만부당한 기만적론의이다.

《민주화예로의 이행방식》에 관한 부르조아적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계급적원쑤들과 자본주의에 현혹된 불건전한자들의 대중적소요에 의한 사회주의붕괴를 《민주화》를 위한것으로 합리화하는 꾀변이다.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은 《민주화예로의 이행방식》의 하나로서의 《혁명》이 주로 《대중에 의해 폭력적인 전략으로 수행되는 민주화》라고 하면서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안정된 통치제도가 수립되지만 이것은 《자유선거,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적인 형태로 진화하기는 어려운것으로 된다고 한다.

《민주화론》자들속에서는 이러한 방식에서는 《경쟁이 제한될수 있고 결과적으로 일당 지배의 가능성을 남기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라고 하면서 회의적으로 대하는 경향도 있다. 그것은 로므니아에서 1989년말에 사회주의배신자들로 구성된 구국전선에 의하여 새 정권이 수립된 후 《자유선거의 도입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국전선의 일당지배의 현상》이 생기고 반대파가 선거실시의 연기와 선거결과의 부정을 주장하여 대중적으로 진출하는 사태까지 빚어낸것을 두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화》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론하는데서 알수 있는것처럼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모략선전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에 룡락당한 대중의 폭력적진출에 의한 사회주의붕괴와 자본주의복귀 역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전략실현의 한 고리로서 초래된것이다.

《민주화론》의 제창자들은 《혁명》에 의한 《이행》방식의 전형으로 로므니아에서 사회주의붕괴시기의 사태를 실례로 들고있다.

《민주화론》에서 말하는 《혁명》이란 소위 《대중적폭력에 의한 민주화》를 념두에 두고있는데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공모결탁에 의하여 일어난 대중적소요에 질겁하여 사회주의를 붕괴시킨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대중적동원에 의한 민주화예로의 이행》이니, 《혁명》이니 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대중기만과 폭력적소요조작을 비롯한 비렬하고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을 감행한 결과로 빚어진 력사의 비극을 《민주화》로 미화분식하는 철면피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에로의 이행방식》들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서방식자본주의정치체제를 끌어들이는 여러 나라들의 경우를 민주주의와 결부시키는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논리로 일관되어있다.

《민주화에로의 이행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실례로 들어지고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이며 사회주의가 붕괴된 결과 생겨난것은 자본주의제도이다.

자본주의대변인들의 《민주화에로의 이행방식》에 대한 설교가 그 목적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쥬아복귀주의자들의 반동적책동을 민주주의를 위한것으로 찬미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역행하는 력사발전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민주화》로 오도하려는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대자본주의《민주화론》은 본질에 있어서 철두철미 전세계를 서방식자본주의로 변모시키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침략과 내정간섭책동을 합리화하는 제국주의침략변호론이다.

우리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발전을 저애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공세를 철저히 짓부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